한국외교 60년

서 장

한국외교 60년의 발자취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 34

2. 동서냉전과 남북관계 | 38

3. 국제화와 경제외교 | 42

4. 탈냉전기 한국외교 | 45

서장: 한국외교 60년의 발자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지 60년이 되었다. 지난 세월 우리 정부의 외교를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대처하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끈질긴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분단된 상황에서 정부를 수립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세계적인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1970년대의 석유파동이나 1990년대의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 역경을 경험하였다.

우리 외교는 초창기에는 전후(戰後) 복구를 위해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냉전체제하의 남북 대립 상황에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남북 간의 경쟁적인 대결외교가 전개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정부는 냉전의 해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및 전세계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이룩한 국력 신장을 기반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하여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전세계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가. 해방과 국제정세

한민족은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기 쉬운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강한 자주정신과 유연한 외교를 전개하여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독립을 지켜왔다. 그러나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한·일합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본에 합병된 이후 한민족은 끊임없이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방식은 크게 무장독립투쟁과 광복외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독립투쟁의 전략상 상호 대립과 보완을 반복하면서 8.15 광복 때까지 이어졌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전개되었던 광복외교 노력은 일제의 방해공작으로 실질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한민족의 입장과 처지를 세계에 알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제 강점하 한국의 독립운동은 당시 세계 약소민족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곧바로 분단의 비극을 맞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한 승전국 간의 잠정조치와 냉전체제의 고착에 따른 것이었다.

연합국들이 한국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전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1943년 이후의 일이었다. 미·영·중 3국 정상은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된 '카이로 선언(1943년 12월 1일)'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공언하였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미·소 간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7월 포츠담 회담 결과 공포된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26일)'에서도 '카이로 선언'이 재확인되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8일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8월 10일 항복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소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 접수 및 무장 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군사적 분계선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냉전체제가 고착됨에 따라 미·소 양국 점령 지역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은 국제적 성격을 띤 정치적 분단선으로 고착화되고 말았다.

나. 남북 분단과 정부 수립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이 발표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4대국 신탁통치를 규정한 협정으로, 즉각적인 자주독립을 갈구하던 한민족의 거족적인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좌우 진영은 1946년 내내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후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군사령부 대표자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1946년 3월 20일-8월 12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한국문제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 이관되었고, 19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선거 실시와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설치를 골자로 한 결의안(총회 결의 제112호Ⅱ)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유엔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면서, 1948년 5월 30일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공포(7월 17일)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출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35년에 걸친 일본 통치와 3년간의 미군정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북한은 1947년 2월 21일 단독정권 성격의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1년 6개월이나 앞서는 것으로, 소련이 북한에 친소 공산정권 수립을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1948년 9월 9일 선포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다려 분단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는 것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자유 우방 국가 및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총회 결의 제195호 Ⅲ)을 채택하였고, 1948년과 1949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약 30개국이 대한민국을 공식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불리한 안보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발언(1950년 1월 12일)하여 안보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나, 1950년 1월 26일 미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힘썼다.

다.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북한은 유엔의 한국문제 개입을 거부하면서 1949년 6월의 주한미군 철수와 1950년 1월 애치슨 발언으로 남한의 안보상황이 허약해진 틈을 타서 1950년 6월 25일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급 군사지원을 요청하였고, 미국의 주도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6일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S/1501) 7월 7일자로 유엔 연합군을 창설(S/1588)하였다.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에 성공한 이후 국군과 함께 북한 지역 수복을 시도하였지만,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1951년 7월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휴전 교섭을 개시하였고 2년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는 일단락되었다. 당초 정부는 통일 없는 휴전을 반대하고 정전협정에 대해 조인은 거부했지만 협정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휴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수락의 대가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경제 및 군사원조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 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서명)' 및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사록(1954년 11월 17일 서명)'이 체결되었다. 이 두 개의 합의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휴전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쟁의 피해로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3년 12월 미국과 체결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은 전후 복구를 위한 한·미 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1953-1960년 사이에 미국의 원조는 총 1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당시 정부 예산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유엔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원조 제공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과 유엔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은 전쟁 중은 물론 전후에도 한국 경제의 재건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하였다.

2. 동서냉전과 남북관계

가. 냉전과 동아시아 집단방위 체제

1950-1960년대는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60년대 후반기에 들어 미·소 간의 견제가 다소 진정되면서 데탕트의 조건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U-2 정찰기 격추 사건(1960년 5월 1일),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10월), 베트남전 발발과 미국의 개입(1964년 8월) 등으로 갈등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고착화된 동서 양 진영의 냉전체제하에서 정부는 미국과 보다 진전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던 주한미군의 주둔군 지위협정과 관련하여 재판관할권 등 보완사항에 관한 재협상 필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1962년 9월 이후 4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66년 7월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가장 쟁점이 되었던 형사관할권 문제가 제한적으로나마 해결되었고 양국 간의 안보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미국 및 월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1965년부터 월남에 군사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1968년 한·미 간 국방각료회의 창설 및 1971년 연례안보협의회 신설 등의 조치와 함께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권고에 따라 1951년 한·일회담을 개시한 이래 14년만인 1965년에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관계개선 과정에서 획득한 대일 청구권 자금(1965년부터 10년간 총 8억 달러)을 공업화 및 국내경제개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한·일 수교는 1960년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던 지역안보협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1965년 이후 월남 파병과 1966년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참여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자유진영 국가 간의 집단방위 체제 강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1966년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지역협력기구를 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아시아 자유진영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켰다.

* 동 책자에서는 이해 증진 및 구분의 편의를 위해 '베트남 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월남'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을 '월맹'으로, 월맹에 의한 통일 이후의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을 '베트남'으로 지칭한다.

나.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대결

남북한은 냉전 기간 동안 긴장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을 고수하였다. 정부는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두 개의 한국'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제사회에서 대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에 이를 공식 철회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로 구성된 비동맹 세력은 1960-1970년대를 통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개선은 당시 유엔에서 전개되었던 남북 간의 대결적 외교와 관련되어 있었다. 1960년 이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 내 세력판도가 달라졌고, 이는 1953년 정전 이후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던 한국문제의 토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좌경화된 비동맹 국가들에 의해 유엔에서 북측 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고 우리측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동맹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 데탕트기 남북관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정치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2년 2월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같은 해 5월

미·소 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체결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의미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1979년 미·중 수교로 이어졌고, 이후 일본 및 서유럽 국가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동서 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인 긴장 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일 논의가 점증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선언을 통해서 북한에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71년 9월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간 긴장완화 분위기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 후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선언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 중단 및 무장도발 중지, 남북 간 제반교류 실시 등의 사항이 합의되었다.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은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선언에서 정부는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외교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남북대화는 1973년 8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중립국들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존의 방문 초청 외교를 지속하는 동시에 비동맹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실리외교를 추구했다.

한편, 1953년 이후 매년 계속된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미국 등 우방의 협조로 한국측 안이 큰 표 차로 통과되어 왔다. 그러나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비동맹 국가들이 좌경화하면서 유엔에서 한국의 절대 우위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이 월맹과 함께 비동맹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1975년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양측의 상반된 결의안이 함께 통과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남북한은 유엔 무대에서 소모적인 외교 대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이후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을 지양하였다.

3. 국제화와 경제외교

가. 경제개발전략과 경제외교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에 필요한 외자(外資)를 도입하기 위한 경제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1년 정부는 55개국에 경제친선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65년 12월에는 대한국제차관단을 구성하기 위한 대외경제협의체(IECOK: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 창립총회를 개최, 재정차관 및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한·일 관계정상화 역시 국내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한·일관계에서도 정치 분야의 관계정상화를 기반으로 경제 분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한·일 간 정기적인 회담을 통해 상업차관 도입 및 대일 청구권 자금 획득뿐 아니라 자본 및 기술협력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인 목표로 '수출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수출 증진에 박차를 가했다. 매월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재외공관에는 매년 수출 목표가 할당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의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나. 국제기구 가입과 해외 진출

정부는 일찍이 1955년에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1967년 세계 다자무역체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1968년부터 68개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 등의 권리와 관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한국의 수입시장도 일부 개방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장기적인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국제경제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GATT 체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협상이 개시되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졌다. 정부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점진적인 개방 조치를 취하면서, 1986년과 1988년에 걸쳐 지적 재산권, 서비스업 개방 및 쇠고기 부분 개방 등에 합의하였다.

1995년에 공정한 다자무역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WTO는 기존 GATT 체제를 대체하였다. 이는 상품 교역만을 대상으로 했던 종전의 자유 무역질서를 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확대시킨 것으로서 보다 통합적인 세계 무역질서의 등장을 의미했다.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진 경제에 진입하기 위한 실리외교를 전개하였다. 1998년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던 것 역시 능동적인 경제·통상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다자주의와는 별도로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구하는 지역주의화 추세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8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창설에 적극 참여하고, 1996년부터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에서 아시아측 조정국 역할을 수임(1998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 세계 경제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동안 개별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00년 이래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과도 협정 교섭을 타결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는바, 정부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FTA 교섭을 조속히 완료하고 자원부국, 신흥경제권 등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1960년 이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외화 획득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서독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1963년부터 광부와 간호원의 서독 송출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 중동 산유국에 대한 건설 수주 등으로 수십만 명의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였다.

19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로의 집단 이민과 197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국민의 해외 이주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해외 교민의 총수가 68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으로 나간 유학생도 계속 증가하여 매년 20만 명

이상이 해외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민의 해외여행은 19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계속 증대해 왔는데 업무 목적의 여행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는 관광 목적의 여행도 크게 늘어서 2008년에는 해외여행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다. 경제위기 극복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원유가가 10배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원유수입국으로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정부는 1973년 중동 사태에 관한 기본입장 4개항을 발표하고 건설 수주 등 중동 지역과의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중동 진출에 따른 외화수입은 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예를 들면 1979년 중동 국가에 진출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송금액은 11억 5,800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2.7%에 달했다.

1997년 동남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외환보유고 고갈로 국가부도위기에 봉착한 정부는 그해 12월에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긴급 구제 금융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그 후 2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하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이는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으로 예상보다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 탈냉전기 한국외교

가. 냉전 종식과 북방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지배해 왔던 냉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완화되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가 집권한 소련이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로 알려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서 간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결국 1989년 12월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양국 정상은 냉전의 종식에 합의하고 상호 적대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지도 아래 실용주의 노선으로 크게 물줄기를 틀기 시작하여 지역 및 세계적인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국제정세는 급변하였다. 198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1990년에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또한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얄타 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서 냉전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한편, 1980년대 초반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에 따라 불안정한 양상을 띠었지만, 1984년 이후 남북 경제회담,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갔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으로 공산권의 개혁·개방 흐름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한 소련 및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89년 초부터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990년에는 소련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1992년에는 한·중 수교로 이어져서 한국외교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외교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유엔 가입과 다자외교

유엔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정부 수립 초기부터 유엔 가입을 열망하였다. 그러나 동서 냉전의 대립 속에서 한국의 가입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정부는 1973년 6.23 선언 이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하나의 조선'을 고집하면서 동시가입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널리 확산되고 소련과 동구권까지 이에 동참하자 북한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과 북은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43년 만에 유엔 가입이라는 숙원을 성취하게 되었다.

유엔 가입 이후 정부는 유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96-1997년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 기관인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총회의장을 배출하였다.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수단 등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군축,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인 문제의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국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 구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북핵외교

냉전의 종식은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산권의 붕괴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권이 소멸되면서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국 간 대화 반대 입장을 포기하고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 1990년 9월부터 남북 총리회담이

여덟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1992년 1월 20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한반도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국제공조를 도모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이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바탕을 두고, 상호이해와 화해를 증진코자 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남북 간 화해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2000년 6월 13-15일)로 이어졌고, 양측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여 남북한 화해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4일간 개최되었는데, 이 때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시대의 본격화를 구체화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자 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3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선언을 하는 등 국제법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후 '미·북 간 기본합의문(1994년 10월 21일, 일명 '제네바 합의')'이 서명되어 북핵 위기가 잠정적인 봉합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 동결 및 해체의 대가로 2003년까지 1,000MWe 경수로 2기를 제공하되, 경수로 1호기 완공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대체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1995년 3월 한·미·일이 주축이 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구성되어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고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미국 등 여타 관련국과의 공조하에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3년 8월 한반도 주변의 주요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처음 개최되었다. 6자회담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결의 1718,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라. 21세기 한국외교의 과제

첫째, 한국외교의 최대 당면과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을 청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둘째, 한반도 평화유지와 궁극적 통일을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하면서 마찰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남아 및 유럽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과 친밀도를 높여가야 한다.

셋째,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군축, 비확산, 후진국 개발, 환경과 에너지, 빈곤과 질병, 테러, 인권 등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문화외교에도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역과 투자 등 국민의 대외 경제 활동을 지원·촉진하고 해외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및 과학기술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보호·육성하는 데도 큰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시대의 요청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외교 관련 기구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외교수요에 걸맞는 외교통상부 조직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